

파이낸셜 뉴스



▲ 6월 15일 파이낸셜뉴스 11면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기업인과 중소기업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국내 중소·벤처기업을 배우기 위해 잇따라 방한하고 있음을 보도한 기사

디지털타임스



▲ 6월 18일 디지털타임스 1면

실적과 담보 위주의 대기업 중심의 여신판 행과는 별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력 평가 체계를 갖추고 중소·벤처기업의 실정에 맞는 벤처 신용평가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는 업계의 요구를 담은 기획기사

기획예산처, 하반기 재정지출 IT인프라 확충 등에 집중 투입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하반기 재정지출 규모가 4조~4조5000억원선에서 확정된다. 이 자금은 대부분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 등에 투입된다.

기획예산처(장관 김병일)는 6월 15일 국회에서 개최된 열린우리당과의 당정협의를에서 ▲산업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지원 ▲서민 생활안정 등을 위해 하반기 재정지출을 이같이 확대 편성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위해 국회 의결없이 사용 가능한 기금 운영계획을 변경, 공기업 추가사업 발굴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조달하고 추경편성 등을 통해 2조원 이상을 마련해 이 같은 규모의 재정을 지출할 방침이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과주 LCD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 지원 ▲정보통신 인프라 확충 및 IT산업 연구개발(R&D) 투자 ▲차세대성장동력 R&D 투자 및 기술개발 장려 등에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IT화, 벤처창업자금, 기술개발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 자금난 완화를 위한 시설·창업·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늘린다. 서민생활 안정지원에는 이공계 미취업자 현장연수 3000명을 포함 5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 사업 등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한다.

중기청, 대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언론에 명단 공개

중소기업청 유창무 청장은 6월 16일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 실태를 조사해 납품단가 인하, 대금지급 지연 등 불공정 거래가 심한 업체는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납품대금을 지연하는 등 하도급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가 적발되면 언론에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일정 품목에 한해 대기업 입찰을 배제하고 중소기업간에 경쟁하는 제도로 바뀔 전망이다.

그간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구심점 역할을 했던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공동판매, 청년실업해소 등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조합’ 형태로 바뀌어나가기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합의서 채택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김용구)는 6월 1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계는 경제 난국 타개와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실천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서 주요 내용은 ▶대기업은 납품단가 및 결제 조건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은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부품 소재산업 발전을 위해 기술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또 ▶임금 안정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업종별 협력분과위원회를 구성하며 ▶전경련과 기협중앙회에 TF팀을 구성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양측은 또 합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 사업으로 ▶주 40시간 시행이 임금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지방순회 간담회를 열며 ▶대기업은 중소기업 신제품 구매를 지원하기로 했다.